

## 비정규직 사업장 원청 교섭 요구 공동 쟁의 조정신청

### “원청이 고용·임금 직접 책임져야 해결”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또 집단구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원청 사용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 천막을 치고 교섭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5월 20일 충남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쟁의 조정신청에는 금속노조 아홉 개 사업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 ▲대우조선해양과 공공운수노조 2개 사업장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민주일반연맹 1개 사업장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 참가했다.

이들 산별노조·연맹 12개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들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원·하청 공동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원청 책임 아래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열두 개 사업장 가운데 여덟 개 사업장 원청 사업주들은 “용역업체와 대화하라.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답신을 보냈다. 네 개 사업장은 답변조



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 등을 책임지는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이 절실하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 “중노위는 원청 사용자 교섭 대상 판정하라”

민주노총은 “원청 직접 교섭 요구는 간접 고용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교섭 대상’이라는 상식적인 판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정부가 더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 대책에서 배제돼 있다. 노조와 교섭으로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게 하는 방

법이 근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성규 노조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 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했다고 고발했다.

윤성규 지회장은 “5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3차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 출입을 요구하는

교섭단을 구사대가 폭력으로 막아섰다”라며 “구사대는 특히 저를 표적 삼아 ‘잡아당겨’라는 지시와 함께 구사대 속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해 왼손 중지가 부러졌다”라고 폭로했다. 윤 지회장은 “저를 구하려던 조합원들도 구사대 폭력에 상처를 입었다”라며 분노했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아직도 20여 년 전 ‘IMF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전했다.

양성영 부위원장은 “1997년 IMF 사태 당시 정부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며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했다. 지금 전국 5만 명의 환경미화원 중 절반인 2만 5천 명은 민간업체 소속이다”라며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처우 등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와 지자체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날 14시께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촉구했다.

# 466명 배 만들다 죽음, 현대중공업에서

1974년 창사, 한 달에 한 명꼴 산재 사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최소 4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들어 노동자 다섯 명이 산재로 사망해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사측 자료를 분석한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부는 1974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50개월 동안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고 밝혔다.

현중 산재 사망자는 1970년대 137명, 1980년대 113명, 1990년대 87명, 2000년대 81명, 2010년대 44명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사례는 1974년 7월부터 5년 6개월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노동자 목숨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시작, 발전한 셈이다.

1980년대 산재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1984년에 24명이 숨졌고,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두 자릿수 사망자를 기록했다. 지부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라며 “1987년 현대중공업 노조를 세웠다. 노동조합이 산재 예방 역할을 했기에 산재 사망자가 그나마 줄었다”라고 주장했다.

## 현대중 창사 뒤 최소 466명 산재 사망

2000년대부터 원청노동자 산재 사망이 줄어들었지만 하청노동자 사망이 증가했다. 지부는 “2000년대 한국 조선업 현장에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현상이 확산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량 감소로 2010년대 산재 사망자 수가 줄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창사 이후 1991년까지 회사 자료를, 1992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자료와

노조 자료를, 2014년 이후는 노조 자료를 토대로 집계했다.

지부는 “1970·80년대 산재 사망자는 원청노동자인지 하청노동자인지 불분명하다. 1990년대부터 원청과 하청 산재 사망자를 별도로 집계했다”라며 “과외한 수치가 이 정도고 실제 산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중지부는 노조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한 1988년 이후 산재 사망사고 200건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추락에 의한 사망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압착과 협착 유형의 사고가 53건, 충돌이 16건, 폭발·화재로 인한 화상·질식이 12건, 감전사가 5건, 유해물질사고가 2건, 익사가 1건, 매몰이 1건이었다. 과로사한 노동자는 41명이었다.

지부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사측이 사고가 발생한 공정·작업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안전 강화보다 납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 강행을 반복했음을 뜻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는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 때문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벌어진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언제까지 사람 목숨으로 배 지을 건가”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46년 동안 현대중공업 안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지만 법인과 대표이사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껏해야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라며 한탄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의 자본은 안전을 강화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 비용이 적게 들기에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태도를 바꾸

지 않는다”라며 “노동자가 사고로 생명을 잃으면 회사가 발각 뒤집히는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재사고가 사라진다”라고 강조했다.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물량이 줄면서 산재 사망과 중대 재해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만 노동자 네 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라며 “조선업은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율이 높다. 언제까지 사람 목숨으로 매워 조선업을 유지할 참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범위 해제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악했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도 개악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작업중지 범위와 노동부 감독 내용이 축소됐다.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계속 죽는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보인다. 언제나 회사 편에 서 있다”라고 성토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노동청에 찾아가 중대 재해가 터졌는데 뭐하냐고 항의를 해야 작업중지를 겨우 내린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경근 지부장은 “노동자 생명보호에 정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재 사망 관련 현대중공업 사업주 엄중 처벌 ▲조선업중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생명안전 권고’ 노동부 수용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자본에 유린당한 교섭권, 금속노조가 살린다

경주·대구·경남,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선전전 벌여 ... 경주지부, “민주노조 지키며 금속 가입 독려”



금속노조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5월 18일 오전 코레스 현장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열었다. 대구지부는 5월 19일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 현장에서 출근 선전전을 벌였다. 경남지부는 5월 19일 위아 현장에서 조합원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퇴근 선전전을 전개했다.

이날 선전전에 참석한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코레스 사측과 기업노조가 금속노조와 지회를 계속 도발하고 있다”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금속노조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복수노조 제도 위헌성을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내세워 사용자들이 금속노조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왜 함부로 박탈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번 선전전을 시작으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뜻을 모아 복수노조 제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최재소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코레스 기업노조가 3년째 사측의 임금동결 제시안에 합의했다”라며 “오직 사측 뜻대로 움직이는 노조가 노동조합이냐”라며 비판했다. 최재소 지부장은 “코레스지회는 소수노조이지만 항상 노동조합 역할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라며 “코레스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 문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진호 노조 코레스지회장은 “노동자 자존심을 지키며 민주노조 깃발을 굳건히 세우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진호 지회장은 “코레스 현장

에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눈감지 않고 금속노조는 계속 투쟁하겠다. 함께 좋은 일터를 만들어보자”라고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장진호 코레스지회장은 “금속노조라서, 또 소수노조라서 정말 서러웠다”라며 “노동조합을 옥죄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폐기하는 투쟁과 사업에 코레스 지회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스물여섯개 지회 가운데 복수노조 사업장은 다이셀, 아진카인텍, 인지컨트롤스, 동진이공, 오리엔스, 발레오만도, 청우 등 모두 여덟 곳이다.

노조 경주지부 다이셀지회는 기업노조가 임금동결 수준으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해 대응 투쟁 중이다. 청우지회는 수주저조를 빌미로 사측의 일방 순환 휴직 결정을 거부하고 출근 투쟁을 하고 있다. 꾸준히 조직화 사업을 벌인 발레오만도지회는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지위를 다투고 있다.